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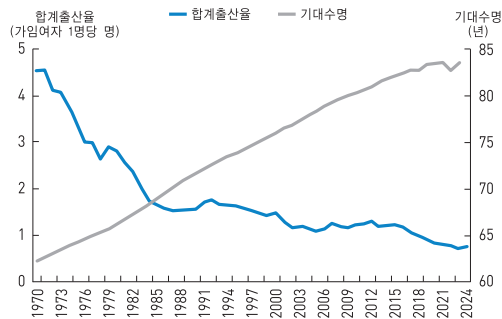
해방 후 ~ 1960년대 초	1960년대 초 ~ 1980년대 초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2000년대 초 ~ 현재
베이비붐 인구폭발	가족계획-출산율 급감 이촌향도-인구집중	저출산 인구 고령화	초저출산 인구 초고령화-인구 감소

[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60년대 초)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 출생률 증가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195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1960년대 초~1980년대 초)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추진되고 국가 주도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다. 1960년경까지 대략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초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다(1983년 TFR = 2.06).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인 1.7~1.4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인 70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고출산-고사망 상태에서 저출산-저사망 상태로 인구변천이 마무리되고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000년대 초~현재)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와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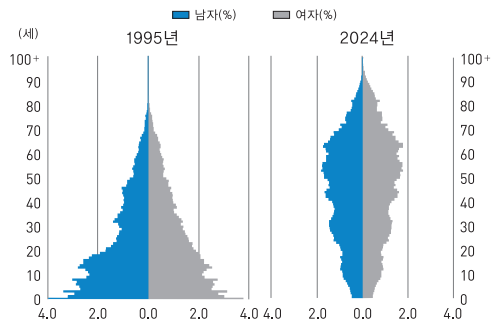
[주요 지표]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인구 피라미드





일상생활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인구변동은 중장기적으로 본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예컨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난제인 인구의 고령화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지난 20세기 후반에 걸쳐 이루어진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의 예정된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인구변동의 추이와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의 기간에 걸친 인구학적 변화의 주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8·15 광복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쳐 최근까지 급격한 인구변동이 일어났지만, 현재까지도 인구통계 시계열 자료의 정비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구변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이러한 변화의 기초가 된 인구변동 요인들에서 나타난 변화를 소개한다. 인구변동 요인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 기대수명과 사망,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으로 구분한다.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되, 국가데이터처의 공표 자료가 없는 기간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제기관의 연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6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상당히 큰 불안정성을 보였다. 이 시기의 인구통계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시에 자료의 내용 또한 연구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1945~1948년의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전, 광복 후 재외 동포의 귀국, 정치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구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시기로 평가된다.

광복 전인 1944년에 이루어진 인구총조사에서 우리나라(남북한) 총인구는 2,590만 명으로 조사되었지만,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남북한으로 분단된 후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실시된 1949년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남한)의 총인구는 2,019만 명 수준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49~1955년의 기간에 연평균 1%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전쟁 휴전 후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증가하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55~1960년 기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3.0%에 달한다(표 I-1). 1945~1955년 기간의 인구성장이 광복 후 재외 동포의 대규모 귀환과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민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과 비교하여, 1955~1960년 기간의 인구성장은 자연증가, 즉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출생률 상승과 항생제 같은 새로운 의약품의 확대 보급에 따른 사망률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새로운 변천기를 맞이한다. 1960~1966년 기간에 2.6%였던 인구성장률은 1975~1980년의 기간에 1.5%까지 감소하였다. 출산력과 사망력 모두 감소세를 보

였지만, 사망률 감소 속도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출생률이 감소함으로써 인구성장률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1962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을 억제하고자 한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및 이와 맞물려 이루어진 사회 구조의 분화와 다원화, 가치관 변동도 이러한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 1990년대 말까지 1.7~1.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I-3). 198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1977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가 198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과 맞물려 사망률도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1970년에 인구 천 명당 8.0명이었던 조사망률은 2000년에 5.2명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변동으로 1990~2000년 기간의 인구성장률은 1%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을 반영하여 1996년에는 정부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구학적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TFR < 1.3)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21~2022년 기간에는 음(-)의 인구성장률을

〈표 I-1〉 총인구, 성비 및 외국인 인구, 1949~2024

연도	총인구		성비 (여자 100명당)	외국인 인구	
	인구 (1,000명)	연평균 성장률 (%)		인구 (1,000명)	비율 (%)
1949	20,189	-	102.1	22	0.1
1955	21,526	1.1	100.1	24	0.1
1960	24,989	3.0	100.8	35	0.1
1966	29,193	2.6	101.5	33	0.1
1970	30,882	1.4	97.1	30	0.1
1975	34,707	2.3	101.3	28	0.1
1980	37,436	1.5	100.5	30	0.1
1985	40,448	1.5	100.2	29	0.1
1990	43,411	1.4	100.7	21	0.0
1995	44,609	0.5	100.8	55	0.1
2000	46,136	0.7	100.8	151	0.3
2005	47,279	0.5	99.9	238	0.5
2010	48,580	0.5	99.0	590	1.2
2015	51,069	0.5	100.6	1,364	2.7
2020	51,829	0.1	100.0	1,696	3.3
2021	51,738	-0.2	99.9	1,650	3.2
2022	51,692	-0.1	99.9	1,752	3.4
2023	51,775	0.2	100.1	1,935	3.7
2024	51,806	0.1	100.2	2,043	3.9

주: 1) 2010년 이전 자료는 5년 단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집계된 자료이고, 2015년 이후 자료는 매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자료임.

2) 인구성장률 $=\{[\ln(P2 \div P1)] \div (t2 - t1)\} \times 100$. P1과 P2는 t1과 t2 시점(연도)의 인구임. 2015년의 인구성장률은 2010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총인구(4,971만 1,000명)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임.

3) 성비=(남자 인구 ÷ 여자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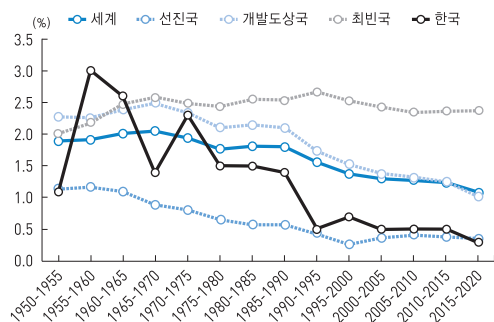
4) 외국인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한국 사회는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초반 이후 40년 이상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에 머물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림 I-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매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앞으로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인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림 I-1] 세계 및 지역별 인구성장률, 195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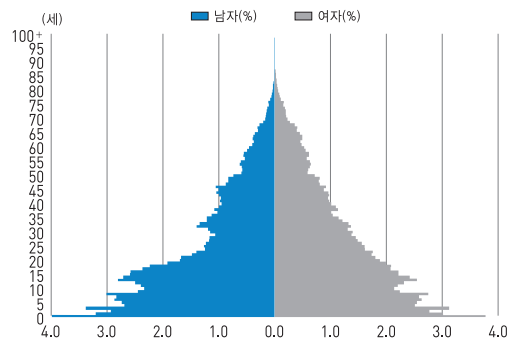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인구의 규모 및 성장률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는 1960년대 이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지닌 피라미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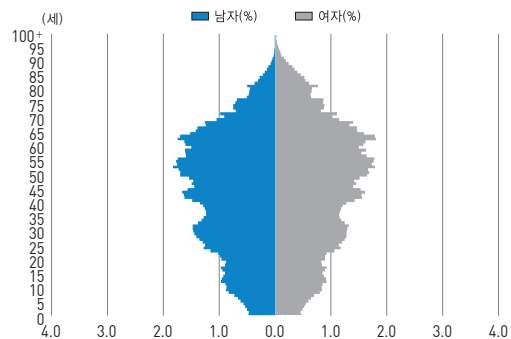
이었다. 그러나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와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의 연령 구조는 종형을 거쳐 항아리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그림 I-2). 연령대별 인구 가운데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표 I-2).

[그림 I-2] 연령 구조의 변화, 1955, 2024

1) 1955년



2) 2024년



주: 1)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9.5%를 차지한다.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부양비(dependency ratio)이다.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로 유소년 부양비는 1966년의 81.8에서 2024년의 14.9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1975년의 6.0에서 2024년의 27.9로 증가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2〉 인구의 연령 구조 주요 지표, 1955-2024

구분	1955	1966	1975	1985	1995	2005	2015	2024
구성비(%)								
유소년인구	41.2	43.5	38.1	29.9	23.0	19.1	13.6	10.5
생산연령인구	55.5	53.2	58.4	65.7	71.1	71.6	73.4	70.0
고령인구	3.3	3.3	3.5	4.3	5.9	9.3	13.0	19.5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74.3	81.8	65.2	45.5	32.3	26.7	18.5	14.9
노년 부양비	6.0	6.2	6.0	6.6	8.3	13.0	17.6	27.9
총부양비	80.3	88.0	71.1	52.1	40.6	39.6	36.2	42.9

주: 1) 유소년인구는 14세 이하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임.

2) 유소년 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100.

3) 노년 부양비=(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100.

4) 총부양비=((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100.

5) 1955년은 외국인을 제외한 자료에 기초한 수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인구변동은 지역별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표 I-3). 총인구 가운데 서울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대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

인다. 2024년의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약 934만 명으로 총인구의 1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인구는 1955년의 18.3%에서 2024년의 50.8%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사회 발전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호남권의 인구는 1949년에 총인구의 26.5%였지만, 2024년에는 10.9%까지 감소했다. 영남권의 인구도 1949년의 31.4%에서 2024년의 24.3%로 감소했다. 호남권-영남권과 달리 충청과 강원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의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3〉 지역별 인구분포, 1949-2024

구분	인구분포 백분비(%)									
	1949	1955	1966	1975	1985	1995	2005	2015	2024	
서울	7.2	7.3	13.0	19.9	23.8	22.9	20.8	19.4	18.0	
권역										
수도권	20.7	18.3	23.6	31.5	39.1	45.3	48.2	49.5	50.8	
중부권	21.4	22.8	21.5	18.2	15.1	13.2	13.2	13.6	14.0	
호남권	26.5	25.8	23.7	19.7	15.9	12.8	11.7	11.2	10.9	
영남권	31.4	33.1	31.1	30.5	29.8	28.7	26.9	25.6	24.3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2)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포함함.

3)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포함함.

4)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함.

5) 1975년은 권역 미상 자료가 제외된 자료에 기초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혼인과 출생/출산

앞에서 살펴본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출생/출산, 사망, 이동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에서 발생한 변화이다. 최근 들어 혼인 외 출산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연계된 핵심적인 요인은 혼인이다. 1955~2020년에 걸친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유배우율을 보면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유배우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표 I-4). 1955년에 남자 73.0%, 여자 89.7%였던 25~29세의 유배우율은 2020년에 이르러 남자 7.2%, 여자 17.3%까지 감소하였다. 30~40대의 유배우율은 대체로 증가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혼인 연령의 상승, 기대여명의 증가(특히 남자), 비혼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남자의 45~49세 유배우율은 2000년에도 90%를 넘었지만, 2020년에 이르러 71.7%로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5~49세 연령대의 유배우율이 감소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혼인 연령의 상승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혼인 연령은 남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에 남편 27.8세, 아내 24.8세에서 2024년 현재 남편 33.9세, 아내 31.6세까지 상승하였다.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최근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8년 이후 33세 수준에서 등락을 보인다(국가데이터처, 2025).

〈표 I-4〉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 1955~2020

(단위: %)

구분	1955	1975	2000	2020	
남자	15-19세	5.5	0.3	0.3	0.0
	20-24세	32.2	7.0	2.4	0.7
	25-29세	73.0	52.6	28.5	7.2
	30-34세	92.7	92.1	70.6	32.9
	35-39세	96.2	97.3	86.4	59.6
	40-44세	95.5	97.7	90.4	68.1
	45-49세	94.1	97.1	91.9	71.7
여자	15-19세	14.3	2.6	0.7	0.1
	20-24세	75.1	37.2	10.7	1.9
	25-29세	89.7	86.8	59.1	17.3
	30-34세	89.8	94.4	86.9	51.8
	35-39세	87.0	93.2	90.7	72.3
	40-44세	81.4	88.2	88.9	77.8
	45-49세	73.6	79.1	86.1	77.9

주: 1) 연령 및 혼인상태 미상을 제외한 자료에 기초한 수치임.

2) 2000년까지의 자료는 전수조사, 2020년 자료는 20% 표본조사에 기초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각 연도.

최근까지 진행된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의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인 1960~1975년 기간의 출산율 감소는 산업화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 같은 근대화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한 과잉 인구의 압력(예, 토지 부족, 기아/빈곤, 실업)에 대한 인구학적 반응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초부터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어 출산율 감소가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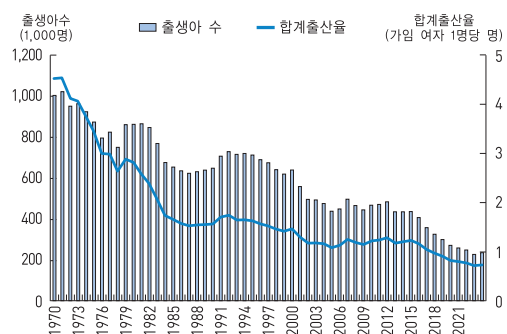
화되었다. 공식적인 인구통계 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지만, 1945년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2002). [그림 I-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가 존재하는 1970년에 이르러 합계출산율은 4.5명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빈곤 상태와 과잉 인구의 압력에 기초한 이전 기간의 출산율 감소와 달리 근대화, 도시화, 경제성장, 가치관 변화에 기초하여 근대적인 의미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무엇보다도 6명 수준을 넘어서는 1960년대의 고출산 상태에서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대체출산율 이하의 낮은 출산 상태로 전환을 이룬 점은 인구학적으로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효율적인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등장은 남아 선호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를 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전개된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현상도 출산율 감소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와 세계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0년대 이후는 출산력 변화에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인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2002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의 변화로 출생아 수에서도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1970년 한해에 1백만 명 이상이었던 출생아 수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1983년에 7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2002년에 40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2000년대 이후 40만 명대를 보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에는 30만 명대, 2020년에는 20만 명대까지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세대(가임기: 15~49세) 인구 규모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였던 부모 세대의 인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부모 세대 인구의 감소는 향후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출생아 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I-3]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70-2024



주: 1) 합계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생애 동안 적용될 때 가임 여자(15~49세) 1명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기대수명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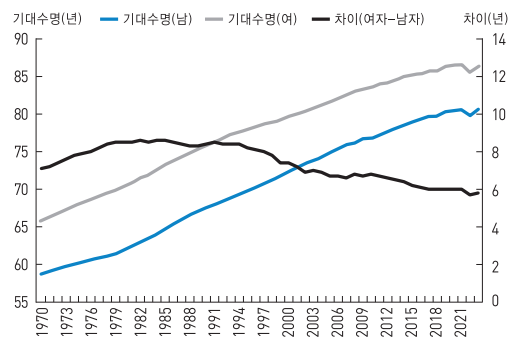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망력 변천은 1900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인구변천 이전 단계의 인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기대수명은 30년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195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남녀 통합)은 22.2년에 불과하다(남자 17.5년, 여자 34.6년). 이후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 후반까지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0년을 넘어서게 된다.

초기의 사망률 감소가 주로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 기인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가파른 감소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망력 변천을 통해 1970년의 기대수명은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 기준으로 62.3년까지 증가하게 된다(남자 58.7년, 여자 65.8년). 이후 남녀 통합 기대수명은 1987년에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을 넘어서게 된다. 대략 이 시점부터 사망률 감소가 인구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참고로 사망력 변천 초기의 사망률 감소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유아기의 사망률 감소는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와 대조적으로 인구 고령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간 수명의 생물학적 한계,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I-4]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이다(남자 80.6년, 여자 86.4년).

[그림 I-4] 성별 기대수명, 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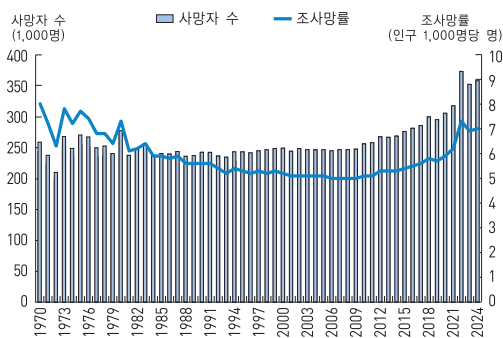
주: 1)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연령별 사망률이 생애 동안 적용될 때 출생 시 기대되는 생존 기간(년)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각 연도.

사망력 변천은 사망자 수를 연앙인구로 나눈 조사사망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사사망률은 190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조사사망률)는 1950년의 47.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1950년의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사사망률은 이후 계속 감소

하여 2006~2009년 기간에 5.0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조사망률은 2010년대 이후 기존과는 반대로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2024년 현재 조사망률은 인구 1천 명당 7.0명이다. 이러한 조사망률의 상승 추이는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국전쟁의 혼란기 이후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여 1960년대 말까지 연간 20만 명대까지 감소하였다(UN 인구통계 기준). 2000년대 후반 조사망률이 최저 수준을 보일 때 25만 명 수준이었던 사망자 수는 이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2022년의 사망자 수는 약 37만 명까지 상승했으며, 2024년의 사망자 수는 이보다 다소 적은 36만 명 수준이다.

[그림 I-5]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1970~2024



주: 1) 조사망률은 특정 연도의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임(1,000분비 표시).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사망률 변천은 사망 원인의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역학 변천 이전 단계에서는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인이지만, 연령 구조의 변화, 의학 기술의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순환기계 질환이나 신생물이 주요 사인으로 등장한다. 사망 원인 분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도 1960년대까지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감염성(기생충)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1970~1980년대 이후에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특히 신생물(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이 주요 사인으로 등장한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에서는 외인사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다. 외인사 가운데 운수사고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외인사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사인이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자 가운데 자살의 구성비는 50.3%에 달한다.

국내 인구가동

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인구가동이다. 인구변동 요인 가운데 인구가동에 대한 분석은 자료상의 제약이 가장 큰 영역이다. 인구가동 분석의 어려움은 인구가동에 대한 정의가 불가피하게 작위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 ‘이동’은 읍면동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 인구이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15 광복과 남북 분단의 과정에서 대규모의 국내이동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자료상의 한계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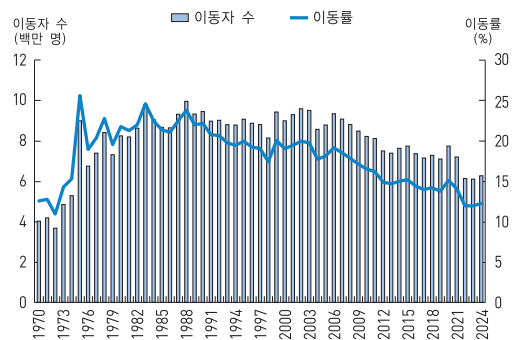
8·15 광복 이후 재외 동포의 입국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월남 인구의 이동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화는 산업화 과정에 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이촌향도)에 기인한다. 이 시기에 서울과 대도시에서 이루어진 인구 증가에서 자연적 증가 못지않게 사회적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인구 분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도권과 함께 주요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전 기간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로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에 이르러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 도

지역에서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이동 통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그림 I-6).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이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이동은 197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1988년에 약 9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인다. 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이동률은 1975년에 25.5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등락 패턴을 보이지만, 이동자 수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I-6] 국내 이동자 수와 이동률, 197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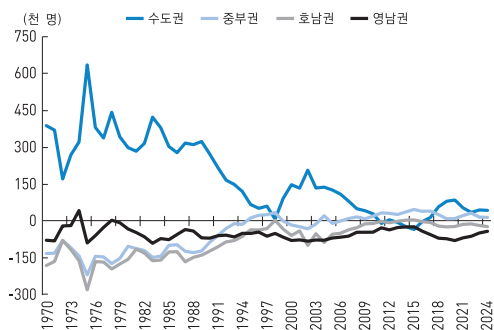
주: 1) 이동률은 특정 연도의 국내 이동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임(100분비 표시).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1980년대에도 1960~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과 부산을 중심

으로 인구 분산화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대도시 주변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추세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절대 규모와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림 I-7]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규모는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1970~1980년대에 걸친 인구 분산화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0년대와 2010년대 후반에 나타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한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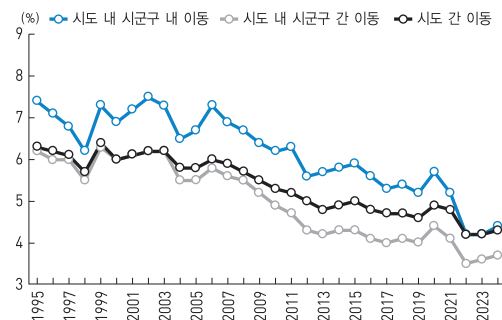
[그림 I-7] 권역별 순이동, 1970~2024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2)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포함함.
 3)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포함함.
 4)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함.
 5) 1986년 이전에는 전국 전출 자료에 국외 및 기타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권역별 합이 전국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순이동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제하여 산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국내이동의 규모와 이동을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인구이동의 경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국내이동을 시도 내 시군구 내 이동, 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 시도 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이동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8]은 이동률이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1995년 이후의 유형별 이동률을 보여 준다. 국내이동의 하위 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이동 유형 가운데 물리적으로 단거리 이동에 가까운 시도 내 시군구 내 이동률이 가장 높은 패턴을 보이지만, 코로나 19가 발발한 2020년대 이후에는 시도 간 이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0년대 이후 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률과 시도 간 이동률의 격차가 확대됨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2010년대 이후의 4대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

[그림 I-8] 국내이동 유형별 이동률, 1995~2024



주: 1) 이동률은 특정 연도의 유형별 국내 이동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값임(100분비 표시).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남권, 영남권) 간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부권으로의 순이동, 2010년대 후반에는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여, 이 시기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된 시기에 해당한다(그림 I-7).

국제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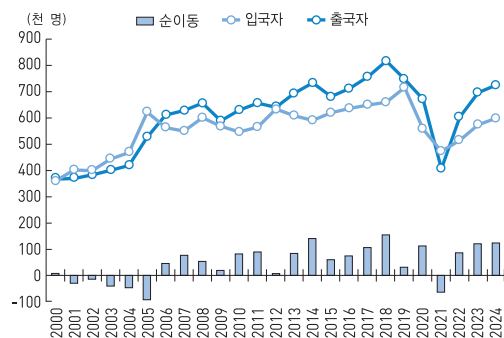
국제 인구이동(이민)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UN의 국제 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정의와 다르게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에서는 3개월(90일)을 초과하여 상주 국가를 옮기는 활동을 국제 인구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형성한 고유의 문화는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제한적(폐쇄적) 인구이동에 기초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폐쇄 사회로서의 특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국제 인구이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전반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이주 현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된다.

국외로의 인구이동이 주류였던 이전 시기와는 반대로 광복 후에는 한반도로 대규모의 귀환이동이 발생했다.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이동을 제외하면 1950~1960년 사이에 국제이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1962년에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국제 인구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1960~19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은 국내의 실업 문제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된 주요 국제 인구이동의 흐름이었다. 1970~1980년대는 국제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분류된다(특히 미국). 비록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국제이동이 활발해졌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규모가 매우 작았기에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국내 인구변동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국외로의 인구이동은 2000년대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순유입 국가로 전환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 인

[그림 I-9] 전체 입출국자 수, 2000~2024



주: 1) 순이동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제하여 산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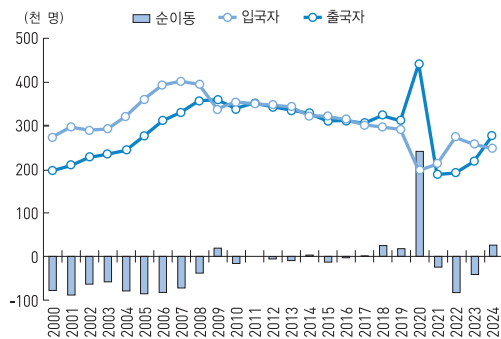
구이동 순유입 현상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에 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지속되고 있다(그림 I-9). 2024년 기준으로 국제 인구이동 순유입은 125,403명에 이른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국제 인구이동 순유입 현상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같은 한시적 이동의 증가에 기초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정주형 이동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인 주요 이민 수용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국제 인구이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2000년대 후반까지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은 패턴을 보였다(그림 I-10). 이후 입국자와 출국자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는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24만 명 정도 많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2022년에는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8만 명

정도 많은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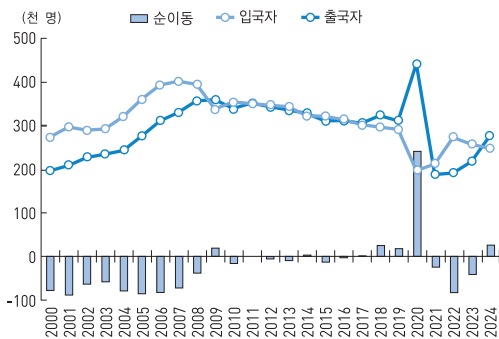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은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순유입 패턴을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기간은 2005년(1만 879명)과 2009년(627명)뿐이다. 그러나 [그림 I-11]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사태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 현상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2만 8,469명, 2021년에는 4만 2,68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는 입국자 수가 전년보다 205,087명 감소했으며, 출국자 수도 63,955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유입자가 대략 16~17만 명이 었다. 2022년의 외국인 순유입자 수는 168,37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순유입 규모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450,867명이며, 출국자는 353,111명에 달한다.

[그림 I-10] 내국인 입출국자 수, 2000-2024



주: 1) 순이동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제하여 산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그림 I-11] 내국인 입출국자 수, 2000-2024



주: 1) 순이동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제하여 산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맺음말

1945년의 광복과 한국전쟁의 극심한 혼란기를 거쳤음에도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채 30년이 안 되는 기간에 걸쳐 고출산-고사망 상태에서 저출산-저사망 상태로의 인구변천을 완료하였다. 출산력과 사망력의 급격한 변화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물론이고, 향후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대응은 한국 사회가 21세기에 당면할 가장 중요하

고도 풀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나타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이어지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비록 인구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 실기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문제에서는 제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편). 2002. 『한국의 인구』. 대전: 국가데이터처.
 이희연. 1986. 『인구지리학』. 서울: 법문사.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파주: 한울.
 홍두승(편). 1997.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